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0. 11. 2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4:00~22:38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281호~제283호

최 준 우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0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2020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20년도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4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3)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7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80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임. 저희 회사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결정을 받게 되어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이고, 기존 최대주주나 임원들은 전부 다 나갔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소임직원들이 노력해서 거의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 과정에 저희가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부과 받게 된다면 향후 정상화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이 행위들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지금 현재 일하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역사와 단절시키고 싶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단절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의문임. Ownership 측면에서 부실화되고 대주주 횡포가 극심했던 기업을 인수하셨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리스크까지 떠안고 인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과연 맞겠는지?

▶ (진술인) 그것은 최대주주를 보고 감면해 준다는 생각보다 14,000여 명의 소액주주들을 같이 포용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위원) 지금 현재 이전 대주주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 (진술인) 지금 회사 쪽으로 가압류가 다 잡혀있고 일부는 ○○○ 쪽으로 양수도가 완료되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관련해서 재판과정에서 고발인들이 주장한 가공공사의 대부분은 진성공사라는 증거와 고발인들의 증언이 있었음. 1심 재판부도 고발 내용의 오류임을 인정하고 이를 판결문에 적시하였음. 재판부의 판결은 가공공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입증의 문제가 아닌 선급금의 목적 및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였음. 영업권 과대계상 관련해서 판결은 RO 매입 관련한 모든 과정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미미한 3곳의 매입과정만 유죄로 판단하였음. 3곳의 유죄 취지도 수

용인들은 무죄 주장으로 2심을 진행 중에 있음. 유죄가 선고된 3개의 RO 거래는 무죄를 선고 받은 나머지 RO 거래와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 무죄 처분을 받았음. 이 부분은 제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부분에서 법적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미기재한 것일 뿐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는 고의적으로 거짓 기재하지 않았음. 이상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본인의 짧은 소견을 살펴주시기 바람.

- (위원)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대표이사를 하였고 ‘본 건 관련하여 무죄 다툼으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고 계신 것인지?

▶ (진술인) 일부 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음.

- (위원)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이 부분은 1심 판결이 무죄이기 때문에 금감원 조치에서도 제외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술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지?

- (보고자) 전체 다 무죄 판결이 난 것은 맞지만 법적판단과 경제적 실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적 가능하다고 보았음. 그리고 배임에서는 엄격한 금액산정을 요구하다 보니 오류가 있으면 무죄인데, 외감법 적용에서는 최소한의 추정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에 포함하였음.

○ (위원) 지금 네 가지 위반 건에 대해 ‘고의’로 감리 지적되었는데 회사측은 전부다 동의를 했음. 사실관계, 중요도, 위법동기, 감리지적금액에 대해 이의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진술인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술인) 제가 피고로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각종 자료를 다 본 결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꽤 많음.

○ (위원)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영업권 과대계상,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이렇게 4건이 있는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다투고 있고 일부는 무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건이 감리지적사항으로 ‘고의’가 되었음. 그중 1~2건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재양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사실을 봤을 때 감리결과에 대해 직원들과 재판부가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의 허위자료 제시와 거짓진술에 의해 (주)○○○○가 특수관계인지 파악하지 못했음은 앞서 열린 감리위

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으므로 오늘 증선위에서는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함. 첫 번째는 감리조치 사전통보 이후에 확정판결이 난 대주주의 횡령·배임 관련 형사판결에서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하여 무죄로 판결이 난 부분을 고려하여 감사인 조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임. 먼저, 공사비 과다지급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금번 조치의 핵심은 감사인이 공사비 과다지급 사실을 감사기준서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 감사 당시에 알 수 있었느냐에 있다고 생각함. 공사비라는 것은 공사 환경 및 공사 시기, 공법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소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사 전문가가 아니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부분으로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하는 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 외부증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검찰 조사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하였지만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결하였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를 한 이후에도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횡령·배임에 이르렀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함. 고소·고발 및 검찰조사 등 이미 여러 상황이 다 파악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법원이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판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 조사 전에 수사권도 없이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이 이를 감사과정에서 공사비 과다지급으로 적시하지 못했다고 조치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하여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함. 감리 이후 시점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

여 무죄 판결한 것을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한 조치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설령 해당 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번 감리조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면책을 호소하고자 함. 회계처리 관련한 금감원의 입장은 횡령이 발생한 시점에 당기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저희 법인이 회사를 통하여 주식으로 제시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대신에 불법행위 미수금을 자산 대 자산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임.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회계처리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님. 금감원이 주장하는 회계처리는 가능한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일 뿐 원칙중심회계인 IFRS에서 이 회계처리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 그래서 저희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국내 회계의 최고 권위기관인 회계기준원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결과도 저희 법인의 입장과 같이 횡령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횡령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에 회수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실처리한다는 것이었음.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 불법행위 미수금이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비용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법인의 입장임. 이와 같이 다른 회계처리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회계처리안을 기준으로 감사인을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 (진술인)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이 회계감사는 허위자료, 허위답변, 위·변조 자료의 제출 등 감사인

에 대한 허위진술로 인해서 특수관계자인 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음. 2020년 2월12일 제3차 증선위 의사록에 지분관계에 대해서 감사인이 조사했는데 지분관계가 없었고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주지 않았으므로 감사인을 제재할 수 없음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저희에게도 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제재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조치양정기준에 보면 회사가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를 위·변조, 또는 위법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할 경우에는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인 경우 그 조치를 면제한다는 점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제출하신 의견진술서에 보면 ‘먼저 공사비 과다지급 관련 법원판결이 언제 나왔는지?’

▶ (진술인) 2020년 8월말경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금감원, 이 판결문에 나온 부분들을 조치안에 반영한 것은 없는지?

- (보고자) 그 부분이 인건비 표준품셈에 대한 얘기인데 법원에서는 일부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임. 다만, 외감법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추정치로 충분히 지적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추정치로 반영을 했음.

○ (위원) 지금 진술인들의 주장은 공사비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감사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허위였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인지?

▶ (진술인) 그러함. 감사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외부증빙에 대해서는 모두 검증을 하였지만, 그것이 전부 위·변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음.

○ (위원) 또 하나는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서에 기초한 회신 내용이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나 원칙인지?

- (보고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손실로 반영을 할 것인지, 불법행위 미수금을 계상하고 불법행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문제였음. 증선위에서 기초치된 사례들도 보면 횡령이 일어난 시점에서 짧은 기간 내에 회수된 것에 대해서는 감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회수된 부분을 반영하여 지적에서 제외를 했지만 횡령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 후에 회수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지 않았음. 지금 본건도 2014년부터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고 발각이 된 것은 2018년 7월에 직원들이 검찰고발을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횡령손실로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임.

▶ (진술인) 사실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음. 이 부분이 드러나게 된 것은 2018년 7월에 직원의 고발

에 의해서 발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17회계연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3월에 이러한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가 정확하게 금액을 내 보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임. 그리고 2014년부터 공사비 과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알게 된 즉시 회사에서 자산을 회수했고 그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음. 이러한 부분은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 저희 심리실부터 시작해서 관련 회계사들이 숙고하여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 (보고자) ○○회계법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계속 감사한 감사인으로 (주)○○○○라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지만 거래의 80% 정도를 그 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감사인들도 (주)○○○○의 거래관계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주)○○○○의 감사보고서를 좀 더 보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질문 외에는 감사조서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음. (주)○○○○에 대해서 의심스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 봤는데 발각이 안 되었다는 것이 기재가 되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데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한 감사절차가 하나도 없음. 과거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해야함에도 조서화 되어 있는 것이 없음. 그래서 회사의 조직적 분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인 ‘과실’조치를 하는 것임.
- (위원)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의 입장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회사에서 숨겨 허위답변이나 위·변조 자료를 제출해서

조직적인 횡령·배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와 관련되어 감사인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인지?

- ▶ (진술인) 그 특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투자관계, 주주관계, 이사회 의사록, 사업보고서 등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조사했음. 그 외에 긴밀한 거래관계들이 있는 의심할만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매년 감사할 때 질문을 통해서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했던 것인데 그것만 부각되어서 다른 것들은 하나도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음.
- (위원) 그런데 회계정보 이용자는 감사인의 감사를 100% 신뢰하고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므로 회계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겠는지?
- ▶ (진술인) 감사의 한계라는 것이 있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피감사인이 그런 내용을 숨기고 조직적으로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어서 답변한다면 그 답변에 의존할 경우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음.
- (위원) 본 회사에 대해서 20××년부터 20××년까지 감사를 하고 계셨는데 이미 최대주주겸 회장이 횡령과 주가조작으로 20××년, 20××년에 특경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는지?
- ▶ (진술인) 시간이 좀 지나서 주가조작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었음. 그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부분을 알게 되었음.

- (위원) 그리고 (주)○○○○가 특수관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송망 공사 90% 이상을 한 회사가 외주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대주주와 경영인이 불법적인 사항을 저질렀고, 그리고 특정 한 회사가 90%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공사 단가까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았는지?

▶ (진술인) 우선,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제로 (주)○○○○를 바라볼 수 없었고 또 큰 폭으로 단가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단가를 결정하는 내부 품의서나 조사서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자관계라든가, 주주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도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었음. 또 저희들이 (주)○○○○에 대한 감사도 했는데 그때도 특수관계자 내역에 이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았음.

- (위원) 영업권 과대계상 관련해서 유선사업자로부터 영업자산을 취득했는데 그 이전에 ○○○○○○가 인수한 가격의

2배로 인수를 했음. 그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알지 못했음.

○ (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가 얼마에 인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는지?

▶ (진술인) 외부 감정기관에서 방송권을 평가한 평가보고서와 계약서가 일치하게 되어 있어 그것이 높다 낮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

○ (위원) 2017년 감사보고서에 공사비 과다지급한 부분을 주식 사항으로 반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사비 과다지급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 (진술인) 소액주주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았고, 제보내용을 숨기고 회사한테 정확한 숫자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음.

○ (위원) 결론론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감사를 하면서 회사의 주가조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 등 이상한 거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관계자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선 금감원에서 최소 조치를 하는 것 같음. 한 단계만 더 나아가서 내용을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특수관계자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과실'로 제재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제재라고 생각하지 않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 ○○○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차명주주를 이용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모두 지인 3인을 이용하였고 2002년에도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이미 구속된 사례가 있음.

○ (위원) 고발은 직원들이 하였는지?

- (보고자) 소액주주가 먼저 고발했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고발하면서 검찰에서는 그 논거를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회계법인은 어쨌든 좀 억울하다는 것인지?

- (보고자) 기존에 ‘고의’에서 면책해 준 부분은 감사 절차를 어느 정도 수행한 경우임. 그리고 회계법인 지적사항 4개 중 2개는 감사절차가 되어 제외했고 나머지 2개의 지적은 조서에 그 부정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음. 오랜 기간(2009~2017년) 동안 감사를 했고 두 회사와의 거래 규모로 봤을 때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음.

○ (위원) 감사인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지금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몰랐으면 모든 것이 다 면책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평소에도 강하게 갖고 있었고 이 건을 보면서도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음. 그래서 회사가 '고의'가 되면 지금 4건씩이나 '고의'가 되는 상황인데 과연 감사인을 그냥 '과실'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굉장히 불편함. 최소한 하나 정도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가 '고의'인데, 회계법인은 '과실'로 한 것에 대해 불편한데 그 건에 대해서 진술 와서 '과실'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그리고 감리위에서 과징금을 50% 감면했음. 본 주식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테마주였던 모양인데 2014년에 비교해서 2015년, 2016년에 일평균 거래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 (보고자)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대선 테마주 이슈가 있어 한 30배 정도 늘었음.
- (위원) 2015년, 2016년까지는 알겠는데 2017년 것을 반액해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임. 2018년과 비교를 하면 2017년과 2018년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음.
- (보고자) 그 부분은 커진 효과로 인해서 일정 수준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음.
- (위원) 저는 금감원이 공인회계사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양정을 한 것 같고, 특히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로컬(local) 회계법인들은 결과만 갖고 항상 본인들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듯이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과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절차는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이것은 한공회 차원에서도, 금

감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시켜줘야 함. 절차이행을 꼼꼼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임. 그리고 (주)○○○○○○○○은 기존의 ○○ 일가는 이미 다 빠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은 맞는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그런 관점에서 요건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2017년 포함해서 50% 감면하는 것이 저는 적정할 것 같음.

○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이, 대선 테마주든 아니든 일평균거래금액 급증이라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임. 50%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함.

○ (위원장) 제280호 안건은 회사의 과징금 부과대상 기간 중 2015년~2017년까지는 일평균거래금액이 급증하여 위반행위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점을 감안해서 2015년~2017년까지 사업보고서 공시관련 과징금의 50%를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5시45분 정회)

▷ 증선위원장 입장함(증선위원장이 회의주재)

(16시04분 속개)

□ 의결안건 제281호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82호 『대신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83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 281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되어 상정된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먼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조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적용법조를 보시면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규정에 대해서 ‘투자매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에 조치원인 사실이 된 세 가지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자료 보시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이것을 신한금융투자(주)의 PBS본부를 통해서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펀드(이하 IIG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의 손익에 대해서는 TRS계약에 따라

손익정산을 하게 됨. 이 사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음. 첫 번째 시점은 IIG펀드로부터 기준가가 통지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준가를 임의 입력하였다고 지적하신 2018년 6월부터 7월임. 두 번째 시점은 2018년 11월 모자형 펀드 전환임. 이것은 무역금융펀드, 실질적으로는 34개의 펀드가 있었고 이 34개와 각각 별개의 TRS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가 이것을 모펀드 하나로 합하면서 각각의 TRS계약은 해지를 하고 모펀드 하나와 TRS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변경에 대해서 2018년 11월에 있었던 부분이 부정한 행위라고 지적을 하셨음. 다음은 2019년 3월에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이하 P-NOTE) 전환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점은 2019년 1월임. 2019년 1월에 신한금융투자(주)가 IIG펀드에 방문해서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임에서 실질적인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IIG펀드를 라임이 떼오고 그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의 대가로 P-NOTE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주)가 부정하게 도왔다고 지적을 하셨음. 이 IIG펀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1월에 이르러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서 이것은 고도의 치밀한 폰지 사기(Ponzi scheme)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음. 결과적으로 2019년 11월에 문제가 있다고 한 시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니 정황상 신한금융투자(주)가 각각의 행위를 하는 시점에 이것을 다 알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보임. 하지만 각 시점에서 한 행위들에 대해서 부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8년 6월 이후의 기준가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여기 신한금융투자(주) PBS본부에서 IIG펀드 사무수탁사로부터 전월의 기준가를 통지 받으면 당해 월에 그것을 라임에 전달하고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금감원에서는 총 14건을 임의로 입력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우선 2018년 5월부터 12월을 잘못 입력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음.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IIG펀드 기준가가 제공되지 않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음. 사실 이 시점에서는 기준가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부실인식의 개연성이 있거나 라임펀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있던 것은 전혀 아니었음.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를 매달 입력해야 되는 신한금융투자(주) 입장에서는 종래에 입력했던 예에 준해서 기준가를 입력했음. 당시에 최선의 방법으로 입력을 했었던 것이지, 임의로 조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2019년 1월, 이 시점에 IIG를 방문하고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셨음. 과거에는 기존에 오던 평가가격의 추세에 비추어서 기준가를 산정했다면 이 시점에서는 부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가를 종래에 일정 수익률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통제를 받았던 2018년 4월분으로 다시 입력을 했었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상각해서 “0”으로 입력했었어야 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신한금융투자(주)가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직전에 통제를 받았던 가격으로 일단 놓는 것이 맞겠다고 평가했던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 부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음.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고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있으며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한금융투자(주)가 TRS계약을 체결한 스왑뱅크에서 매달 기준가를 산정해서 통지해야 되는 의무에 기초해서 행위를 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준가가 오지 않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지, 이것이 각 14건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음.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주)는 (주)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 34개와 각각의 TRS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주)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모펀드 하나로 합하면서, 즉, 자펀드와 체결했던 34개의 TRS계약은 해지를 하고 모펀드와 하나의 TRS 계약을 체결했음. 금감원에서 지적하신 것은 IIG사무수탁사가 IIG펀드의 부실 개연성을 언급한 Email을 확인하고 그 부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모자형 구조 변경을 완료했다고 지적을 하셨음.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바는 IIG펀드 통보를 받게 되자 관련 부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환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가 통지가 지연되기 이전 시점부터 미리 모자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완료된 시점이 우연히

근접한 시점이었고 실질적으로 신한금융투자(주)가 “이 펀드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지한 2019년 1월 훨씬 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저희는 하나의 행위로 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그래도 35개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시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나. 감경사유를 보시면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지금 35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면 법률상 최고한도액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이 되는데 금감원에서는 총 35건에 5,000만 원씩 해서 17.5억 원을 부과하셨고 저희는 이것이 전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라임 건은 아니지만 헤리티지 건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가지급금을 선지급하였고 라임 건에 대해서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70% 보상결정을 하고 이후에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 적극 수용해서 100% 보상을 다 지급완료하였음. 사실 라임사태가 발생하고 투자자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그 행위 당시의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부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과실이나 잘못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금 여기 과태료의 대상이 된 행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는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정상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권주 인수행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를 보시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처분하면 안 된다는 과거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본건과 같이 과거 주식 등 보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IPO주관업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가격이 다 결정되고 나서의 실권주 인수한 것까지를 이 규정위반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금감원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 4,000만 원 부과를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12년 1월3일인데 2016년 12월1일에 1차 유권해석이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주관업무를 하면서 높은 발행가격으로 상장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셨음. 이러한 1차 유권해석이 있었고 업계의 관행상으로도 사실 실권주를 인수하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에 대해서 실권주를 인수했다가 실제 25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완료된 다음인 2017년 10월12일에 2차 유권해석이 있었음. 2차 유권해석을 보면 ‘상장 후에 단기간 내에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2차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를 30일 동안 보유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됨. 2차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주)가 1차 유권해석에 신뢰해서 행위를 한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부과기준상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공적인 견해 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로써 그것을 신뢰하고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본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도 같이 참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3가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 ‘IIG펀드 기준가격 조작’ 이렇게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지?

▶ (진술인) 실제 내용은 라임과 합의된 계약에 따라서 기준가를 산정했을 뿐임. 저희가 그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준가를 산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위원) ‘투자구조 1차 변경에 의한 손실 전가’. ‘PBS사업본부’는 ‘18.6말경부터 IIG펀드의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IIG 펀드에 투자한 17개 라임 펀드의 환매 필요자금을 IIG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 17개와 신규 펀드를 통해 조달하기 위해 상기 34개 라임 펀드와의 TRS계약을 종료(‘18.11.23.)한 후, 34개 펀드 재산의 대부분이 투자된 ‘라임 플루토-TF 1호 (모펀드)’와 신규 TRS거래(‘18.11.26.)를 하는 방식으로 35개 라임 펀드를 사실상 합병’이라고 하고 있음.

- (보고자) 신한금융투자(주)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이미 무역

금융에 관한 언론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한금융투자(주)가 무역금융에 대해 공을 들였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회나 검찰입장, 재판부의 입장이 사실은 똑같음. 재판문의 일부를 발췌해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고 저회 입장도 같음.

- (위원) ‘투자구조 2차 변경에 의한 라임 펀드 손실 가능성 증대’ ‘19.2.22. IIG펀드(장부가액 2억 달러)를 정상 해외 무역금융펀드(3억 달러)와 함께 싱가포르 소재 트리테라스에 매각하고 액면금액 5억 달러의 약속어음(P-NOTE, Promissory Note)을 받기로 3자간(라임, 신한금투, 트리테라스) 합의하고’ ‘약속어음의 연이자율(5%)을 기준으로 TRS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등 외관상 TRS의 기초자산이 약속어음으로 변경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이자는 트리테라스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환매를 신청하여 회수하는 금액에 연계되고, 만기는 해외 무역금융펀드로부터 100% 환매를 받는 시기와 연계되어 있는 부실 은폐 목적의 거래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주) 쪽에서는 어떠한지?

- ▶ (진술인) 2019년 2월22일에 있었던 일은 Indicative Term Sheet이라고 일종의 Term Sheet을 체결함. 이 Term Sheet의 체결 당사자로 들어간 사람이 트리테라스에 있는 그쪽 대표 1명 그리고 ○○○부사장, ○○○본부장 이렇게 3명이 서명을 함. 그런데 이 Term Sheet 내용에는 만기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아니면 상한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지적하시는 약속어음의 독소

조항들은 없었음.

- (위원) 2019년 2월22일 이 시점은 손실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데,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임.

▶ (진술인) 사실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부실 가능성에 대해 다들 어느 정도 인지는 한 시점이었지만 라임에서 제안한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 하방을 막기 위해서 IIG 펀드를 자기들이 떠가겠다.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하고 그것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약속어음(P-NOTE)라고 한 것으로 구현이 된 것인데, 그것을 신한금융투자(주)가 2월부터 알고 이것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음.

- (위원) 첫 번째는 부실 인지를 못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실 은폐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과태료 건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음. 첫 번째, 부실인지를 못한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부실 은폐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자형 구조로 바꾸었다거나 P-NOTE 구조로 바꾼 것이 부실 은폐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는 펀드와 손해를 많이 본 펀드를 뒤섞었는데 그것이 부실 은폐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 입장은 사후적으로 IIG펀드가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했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2018년 그 당시에 이 펀드는 부실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었음. 그런데 우리가 부실을 인지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음. 첫째, IIG펀드의 기준가격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실을 알았어야 되었느냐는 부분에서 기준가가 오지 않은 일은 사실 종종 있는 일임. 기준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알리고 고쳐야 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판단임. 다시 말해서 합의된 기준이 있다면 그 펀드의 기준가를 알리는 것임. 모자형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모자형 펀드라는 것이 은폐의 목적이 있으려면 이와 같이 부실화되는 것을 알았을 때 은폐 목적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해외 무역펀드가 건전하게 잘 운용되고 있을 때는 은폐 목적이 있을 수 없음. 그런데 실제로 모자형 구조 펀드의 시작 시점인 2018년 11월14일자에 IIG로부터 받은 공문 이전에 이미 별도로 진행되었던 것이고 중간에 IIG로부터 공문이 오기는 왔지만 그때 당시에 그 공문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

- (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언제 부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시점의 문제임. 신한금융투자(주)에서는 부실 인식을 언제 정확하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환매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국내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에 따른 것이니까 환매청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

겠지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혹 환매청구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음.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유 동자산임. 대체자산들은 환매를 하기 어려운 시점들이 분명히 존재함. 투자계획에 맞춘 그 기간이 안 맞으면 환매가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 펀드들의 일반적인 해결책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올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게 됨. 그러니까 환매청구가 있었고 그것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임.

▶ (진술인) 그때 당시에 환매가 들어오고 그 환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은 (주)라임자산운용에서 나름 계획을 세우게 됨. 그런데 5월에 기준가가 오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6월말까지만 오면 됨. 지금 말씀하시는 재매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자료가 작성되던 그 시점에는 기준가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확정되기 전임.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6월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가가 오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는 것 자체가 약간 시차가 있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시차 없이 6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음.

○ (위원) 그러면 신한금융투자(주)에서는 IIG펀드의 부실을 언제 인식을 하셨는지?

▶ (진술인) 구체적인 부실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시면 사실 P-NOTE 계약에 진입할 시기에도 과연 진짜로 부실이 발생했다고 인식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움. 어떤 문제가 있

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희가 부실의 규모를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

- (위원) 두 번째 쟁점(cluster)을 보면 2018년 11월17일에 사무수탁사(Maples Fund Services)가 Email을 통해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손실 발생”이라는 문구가 있음. 그리고 “환매중단”이라는 얘기가 나옴. 이미 2018년 9월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기준가 산정을 계속 80% 수익률을 창출한 것으로 기술했음.

▶ (진술인) 그 당시 공문의 영문 표현 자체가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기는 있음.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주) PBS본부에서 IIG에 문의했을 때 기준가가 오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펀드의 구조조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옴. 그러면 이때 말하는 “Significant loss”라는 그 표현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손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12월부터는 굉장한 노력을 하였음.

-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쟁점(cluster)임. 2019년 1월에 실사를 해서 어떻게 측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 달러의 손해를 측정하셨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은 2018년 4월로 회귀를 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수탁사(Maples Fund Services)에서 제시(quote)해 준 마지막 1주당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논리인데, 실사를 가서 3억 달러 중에 1억 달러. 즉, 3분의 1

정도의 손실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선정을 하였는지?

- ▶ (진술인) 일단, 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됨.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마진콜을 부르고 상대방은 바로 분쟁을 개시하게 됨.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함부로 상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2018년 6월 행위 당시에 부실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 ▶ (진술인) 1심 판결을 보시면, ○○○본부장이 인식하고 있었던 부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했다, 고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님. 아마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라고 보았음. 다시 말해서 1심 판결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확정적인 고의로 판단하지는 않았음.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당시에 부실 인식이라는 것이 매우 허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함.

○ (위원) 확정적 고의는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법원도 인정을 했고 이것이 최종 판결이 아니니 그것을 감안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미필적 고의니 감경해 달라는 얘기인지?

- ▶ (진술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위원님들의 시각 중에 부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부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부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신한금융투자(주)에 부실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을까 하는 두 가지 점을 구분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음.

▷ 제 281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퇴장함.

(18시50분 정회)

(19시30분 속개)

※ 제 283호 안건 관련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케이비증권(주) 대표이사 ○○○임. 당사는 2017년 통합 케이비증권(주)으로 출범하였으며 곧이어 초대형 종합 금융투자사업자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가 되었음. 합병을 통해 거대해진 회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에 충실하고 외형적인 성장에 더불어 내실을 갖춘 진정한 대형증권사로서의 기초를 다지라는 임무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역시 라임 및 그 임직원들의 사기와 횡령에 따른 라임사태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음. 이 점에 대해 케이비증권(주)을 신뢰하고 계신 고객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림. 다만, 검사국이 당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고 당사가 그에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대표이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하여 소명을 드리고 선처를 구하고자 함. 대표이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당사가 (주)라임자산운용의 위법거래를 인지하였다거나 당사가 (주)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이익이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점임. (주)라임자산운용의 사기 또는 횡령, 범죄와 결탁해서 그들을 위한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를 정도로 저희 케이비증권(주)이 부도덕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펀드 자산 실사 등의 권한이 없는 판매사이자 단순히 TRS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당사가 라임사태를 온전히 막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움. 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시에 사모펀드운용사 중 가장 많은 수탁고를 보유하고있던 (주)라임자산운용과 거래관계를 맺지 않았어야 했었다는 것임. 당사는 라임펀드를 570억 원 판매하였으며, 라임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선보상하였음. 더불어 당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에서는 유일하게 금감원에게 향후 진행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하였음. 이는 과거 호주부동산펀드 사고시 금융당국의 어떠한 요청이 없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선보상 결정을 한 당사의 의지이며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권회사보다도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함. 더불어 당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라임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2월부터 삼정KPMG의 내부통제 관련 진단 컨설팅을 맡겨 2,000여

건 이상의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라임사태를 전·후하여서도 상품개발, 거래, 심사, 판매 이 과정을 총망라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어 그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였음. 케이비증권(주)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케이비증권(주)의 대리인 ○○○임.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조치예정인 내용의 요지와 본 의견진술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조치원인사실 및 제재양정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검사국은 두 차례에 걸친 부문검사에서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제재대상 사실로 9가지 점을 지적하셨음. 그중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10억 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1억 4,400만 원, 공모주 차별 배정에 대해 3,000만 원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1억 7,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계시고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기는 하지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케이비증권(주)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現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를 예정하고 있음. 케이비증권(주)으로서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검사국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해명하고 싶은 점이 있으나 이번 진술에서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과 공모주 차별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

도록 하겠음. TRS거래 구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케이비증권(주)은 투자매매업자로서 전문투자형 펀드와 TRS 거래를 하였고 그 펀드의 지시에 따라 기초자산을 거래하였음. 케이비증권(주)은 투자매매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일 뿐이며 이는 전문투자형 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 지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지위 역할과는 뚜렷이 구별됨. 검사국은 본건 조치원인사실로써 (주)라임자산운용의 위법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케이비증권(주)이 이를 알면서 자체 지수 설정, TRS 계약 등을 사용하여 감추어 주려고 했다고 지적하나, 케이비증권(주)은 라임 등의 위법한 거래를 알지 못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 TRS 등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바 없음. TRS의 거래상대방인 펀드의 설정은 운용사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투자매매업자가 이에 관여하지는 않음. 검사국은 첫 번째로 (주)라임자산운용이 주식 등의 저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라임자산운용 등에 권종형(Tranche형)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1종 수익권자인 라임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2종 수익권자인 라임 고유재산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케이비증권(주)이 자체 지수 생성, TRS계약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러한 (주)라임자산운용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려고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케이비증권(주)은 (주)라임자산운용이 어떠한 경위로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고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음. 그리고 케이비증권(주)은 라임 메자닌 6호를 제외하고 ○○○ 등이 관련 펀드에 2순위 수익자로 참여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음. 어떠

한 사정을 알았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 설사 (주)라임자산운용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케이비증권(주)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 그리고 검사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하는 사항들, 즉, 타운용사에 대한 거래소개, TRS 거래 관련 세부 사항 안내, 자체지수 생성, TRS 계약, TRS 거래에 따른 케이비증권(주) 명의의 증권 소유 및 공시는 모두 케이비증권(주)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거나 TRS거래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임. 검사국은 두 번째로 라임과 라움, 라임과 포트코리아가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하였고 케이비증권(주)이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해 TRS 계약을 제공하였다고 지적하심. 우선, 검사국이 TRS 계약을 부정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시는데 TRS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이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타운용사들 간의 거래가 자전거래 또는 자전거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설사 그러한 거래가 위법한 연계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매매업자로서 TRS거래 상대방에 불과한 케이비증권(주)이 이러한 타운용사 간의 거래가 위법한 연계거래인지는 알 수 없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 (주)라임자산운용이 라움 펀드 등을 OEM펀드로 운용할 요량이었으면 라움 등에 직접 운용지시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케이비증권(주)을 통해 전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검사국은 (주)라임자산운용이 OEM펀드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운용지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운용지시를 간접적으로 전

달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가 OEM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국의 지적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경험칙에도 반함. 케이비증권(주)으로서는 라움 펀드 등이 OEM펀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설사 (주)라임자산운용이 OEM펀드설정 및 운용을 위해 그러한 정보전달 및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케이비증권(주)이 그러한 의도를 알 수는 없었음. 다음으로 과태료 제재 양정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음. 위원회회가 잘 알고 계시듯이 과태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그 수를 확정된 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가중·감경 사유의 유·무를 따져 부과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특히, 위반행위의 건수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기준에서는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규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검사국은 케이비증권(주)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지적하면서도 규범적 행위 동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 펀드별로 하나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간주하여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법정최고금액인 5,000만 원에 20건을 곱한 10억 원의 과태료를 산정하였음. 하지만 위반행위 건수는 단순히 펀드 수가 아니라 규범적 행위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그리고 본건에서 케이비증권(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 위반행위 수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

음. 그리고 검사국은 케이비증권(주)이 (주)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를 알고 이를 은폐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케이비증권(주)은 라임 펀드 등과 TRS거래만을 수행한 투자매매업자로서 (주)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 따라서 케이비증권(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반동기는 '하'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②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태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 취지에 대해 검사국은 달리 해석하고 있는 듯하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2015.8.27.)에서는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말씀드린 규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와 임직원에게 대한 인적 제재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국은 부문검사 이후 케이비증권(주)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건의 외에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의 임직원에게 대해 중징계 조치를 예정하고 있음. 바라건데 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제재 및 징계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람.

- ▶ (진술인) 저는 케이비증권(주) IB부문에서 근무하는 ○○○임. 이어서 공모주 수요예측 차별배정 관련으로 의견진술 하

겠음. 본건은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물량배정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수요예측과 관련한 규제는 이미 협회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감원도 본건에 대하여 협회로 본건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요예측과 관련이 없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재 및 과태료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진술임. 그럼으로써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은 차치하고라도 수요예측 규제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저희는 수요예측에 대한 법령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난 후에 금감원이 제시하는 해당 법규가 수요예측에 과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음. 금감원이 지적하는 조치원인사실은 ITM반도체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대표주관사인 케이비증권(주)이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부당한 동기로 물량배정을 우대하였다는 것임. 그것은 이해관계인인 ○○○연금보험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감독당국의 업무가 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의 지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저희 업무의 교훈으로 삼아 향후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그와 같은 이유로 시장규범의 확정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관점에서 관련법규의 점검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수요예측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건이 선례로 남는 경우에는 향후 수요예측 업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업계의 관심도가 실제로도 높은 상황임. 그래서 저희는 수요예측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님. 그리고 과태료의 다과(多寡) 여부를 다

투는 것도 아님. 오히려 관련법규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
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공모절차를 보면 증권
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
예측이 끝난 후에야 별도로 '청약(일반, 기관)'을 하게 되
고 그에 따라서 배정과 납입을 함. 수요예측을 청약보다
앞서서 별도로 하는 이유는 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
요예측을 하고 그것이 끝나야 비로소 매매의 의사표시인
청약을 받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과 희망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확정적
매수의 의사. 즉, 청약과는 전혀 다른 것임. 그래서 청약과
배정 절차는 더욱 엄격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된 후에 청약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사가 그 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법의 원칙임.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수량통
보를 업계에서는 통상 물량배정 또는 물량통보라고 함. 이
'배정'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배정과
는 다른 개념임. 상법과 자본시장은 청약자에 대한 매매의
승낙이 배정인 것이고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그러한 청약과
매매의사 확정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
계에서 통상 쓰는 수요예측 과정에서의 배정은 물량배정으
로 부르고 있음. 금감원이 근거법규로 제시한 법규는 증권
의 청약자에 대한 차별배정금지 조항임. 대상이 증권의 청
약자임. 그리고 그 청약을 한 청약자에 대해서 배정을 할 때
동등하게 해야지, 원래 차별을 하면 안 됨. 이것이 이 조항
의 의미임. 금감원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것이 곧 청약이고
수요예측과 청약이 동일시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업계
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우선, 수요예측과

청약 및 배정은 별개의 일정으로 따로 진행됨. 수요예측이 끝나야 청약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청약에서의 의사표시와 수요예측에서의 희망표시는 매우 질적으로 다름. 둘째로 수요예측을 청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의사와 명백히 배치됨. ○○○연금보험은 수요예측에서 984억 원의 대수 희망 의향을 표시했음. 이것이 진짜로 확정적인 대수의사의 청약이라면 ○○○연금보험은 아이티엠반도체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금산법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수요예측은 투자자의 단순한 의향표시 또는 수요예측의 역동성을 감안한 의지표시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구속력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인 청약과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임. 끝으로 금감원의 해석론은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에서는 984억 원을 희망 표시했는데 정작 청약일에는 청약을 하지 않았음. 그러면 ○○○연금보험은 983억 원의 청약자인지? 아니면 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청약자가 아닌지? 아니면 청약자인 동시에 청약자가 아닌 것인지 이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수요예측제도와 청약배정 절차를 동일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지금 대리인께서는 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쟁점이 3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음. 첫째,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과 두 번째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고 세 번째는 공모주 차별배정 금지 위반인데 '라임이 권종형 펀드인 라움 메

자닌 6호(OEM)를 설정하고 전환사채 콜옵션을 이용하여 1종 수익자인 라임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라임 고유재산 등 2종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라움에 OEM펀드 설정 알선, 라움 메자닌 6호의 순자산가치를 추종하는 자체지수 생성, 라임 고유재산과 자체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계약 체결을 통해 라임의 위법행위를 은폐·조력' 했다고 되어 있음.

- ▶ (진술인) 먼저, 저희가 메자닌 6호 설정에 관련하여서 (주)라임자산운용과 먼저 협의를 마치고 나서 (주)라움자산운용에 설정하고 이 자산을 편입하라는 식으로 운용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그 이유는 넥센테크라는 상장사가 있었음. 1회차 CB, 첫 번째로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제3자에게 배정을 하겠다는 공문을 8월16일자로 보내왔음. 그 공문을 보면 이미 콜옵션에 배정을 받는 자가 (주)라움자산운용 메자닌 6호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 이 말은 무슨 말이나면 케이비증권(주)과 협의하기도 전에 8월16일자로 발행사와 (주)라임자산운용과 (주)라움자산운용이 협의를 한 것이고 그들끼리 배정을 (주)라임자산운용이 대거 가지고 있는 넥센테크의 전환사채권에 대해서 콜옵션 행사를 해서 (주)라움자산운용에 배정을 하겠다고 미리 결정한 사안이었고 그것이 8월16일이었음. 금감원 검사국에서 지적하신 실행계획이라든지, 거래구조도 이 부분은 작성한 날짜가 8월20일임. 저희가 공문을 먼저 (주)라움자산운용 메자닌6호로 배정할 것이라는 공문을 수신한 이후에 8월20일자로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저희와 TRS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Operational risk. 자금 통제라든지 자산의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콜옵션에 대한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취급해 본 것들이 아니었음. 심지어 저희 부서(Desk)도 TRS를 굉장히 많이 취급하는 부서이지만 이 건이 콜옵션 행사의 첫 번째 건이었음. 그런 배경에서 저희는 어떠한 금융사고를 방지해서 그 수익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모르고 현재도 정확히 모름. 어쨌든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자금의 유출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Operational risk. 그러니까 운영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 검사국에서 제시한 실행계획(Action plan)임. 그런데 이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한 시기와 작성 목적을 보더라도 이것이 운용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주)라임 자산운용의 운용지시를 (주)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하는데 저희 템플릿(template)은 (주)라임자산운용으로 갔음.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라임자산운용이 넥센테크 1회차 CB의 최대 채권자였음. 그 채권자들이 콜옵션 행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해줬을 뿐임.

○ (위원) 결론적으로는 은폐조력을 전혀 한 적 없다는 얘기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TRS와 권종형 펀드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지금 금감원에서 적시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TRS와 정상적인

권중형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지금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적된 20건 중에 몇 건을 인정하시는지? 1건도 인정을 안 하시는지?

▶ (진술인) OEM펀드 관련해서 20건의 펀드 중에서 (주)라임 자산운용으로부터 운용사 소개를 받은 적도 없는 펀드가 6개 있고 나머지 14개 펀드조차도 운용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이지, 라임의 운용 지시를 전달하는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적인 입장은 20개 펀드 다 OEM펀드 관련해서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임.

○ (위원) 그다음 권중형이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님. 그런데 결국 1종 수익권자 Low Return, Low Risk이고 2종은 High Return, High Risk가 맞음. 그런데 케이비증권(주)의 주장은 이익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에 2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무자본 M&A나 ○○○씨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3호를 보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에스모머티리얼즈 주식 90만주와 관련한 것을 보면 이익이 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감.

▶ (진술인) 검사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익은 평가이익임. 일단, 첫 번째로 해당 투자재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었음. 그리고 당장 실현이 불가능함. 왜냐하면 실현을 한다는 것은 Cash out을 한다

는 것인데 Cash out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케이비증권(주)이 담보를 인출해 주어야 됨. 저희는 원칙대로 담보 인출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고 또한 끝까지 저희가 담보비율을 모니터링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대매매를 해서 100억 원에 설정되었던 펀드가 0원이 되었음.

- (위원) TRS 자전거래 관련되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자전거래일이 분명한 동일 운용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전거래 관련 운용지시서 및 자전거래 사전승인서를 교부받아 업무처리를 했다고 해서 라임 GAIA 1호 운용지시서와 자전거래 사전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셨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 예를 들어서 라움 멀티에셋 1호나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5호의 경우에도 운용지시서와 자전거래 사전승인 신청서를 구비하고 계신지?

▶ (진술인) 구비하고 있지않음.

- (위원) 그것은 왜 없는지?

▶ (진술인) 지금 두 가지 거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라임 플루토 3호에서 라움 멀티에셋 1호로 간 거래 하나를 지적하고 있음. 또 하나는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13호에서 라임 테티스 2호로 갔다가 다시 포트코리아 런앤히트 5호로 간 거래를 지적하고 있음. 그래서 동일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케이비증권(주)으로서는 이것이 연계 자전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임.

○ (위원) 공모주 관련되어 수요예측과 청약 사이에 물량배정이 있음. ○○○연금보험과 ○○○○○○○○ 중 누가 청약을 하고 수요예측을 했는지?

▶ (진술인) 수요예측은 두 기관 모두 각각 984억 원을 했음.

○ (위원) 각각 984억 원을 수요예측을 했고 물량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 (진술인) 2억 원 밖에 못 뵈음.

○ (위원) ○○○연금보험에 2억 원, ○○○○○○○○에 2억 원으로 각각 2억 원씩 뵈는지?

▶ (진술인) ○○○○○○○○는 청약한 대로 1억 9,000만 원이 이 루어졌고 ○○○연금보험은 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배정도 없었음.

○ (위원) 그렇다면 ○○○○○○○○는 수요예측 물량배정 받은 곳에서 청약을 한 것이고 ○○○연금보험은 청약을 안 한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아까 청약을 안 해도 수요물량 배정 통보받은 그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을 할 수 있는지?

▶ (진술인) 청약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음.

-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어 보겠음. 아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30% 할인되는 가격에 취득하고 케이비증권(주)이 조력을 해서 증거금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도 하고 그래서 편입하는 시점에서 2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이 나는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모 CB 같은 것도 똑같음. 전환가액이 1,894억 원이고 주식 총가가 9,420원이니까 그 CB에 대한 이득을 2종이 다 가져가는,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High Risk, High Return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겠지만 이것은 이미 거의 실현된, 그리고 투자금액도 2종의 투자자는 전체 10%라는 아주 소액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은 불법·부당한 거래로 볼 수 있지 않은지? 아무리 케이비증권(주)이 우리는 TRS 거래에서 중간역할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태를 보면 그런 것을 인지하고 불법·부당하면 그것에 대한 거래를 시행하지 않아야 됨. 그 정도의 컨트롤 기능은 없는지? 그 당시로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거래이고, 그런데 케이비증권(주)은 그런 것을 인지하고도 조력을 한 것이 타당하냐는 것임.

-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 첫 번째로 수익자 구성. M&A세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주)라임자산운용 관련자들이 수익자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메자닌 6호를 제외하고는 몰랐음. 두 번째로 말씀대로 평가이익이 과대하게 2종에 귀속된 사실을 인지하려면 1종과 2종 수익권의 비율을 알아야 됨. 지금 중국적으로 검사과정을 통해서 9:1로 1종이 9 그리고 2종이 1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레버리지 사용분에, 또 권종형을 통

해서 레버리지 사용되는 부분이 감안되어 평가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것임. 그 거래 당시에는 1종과 2종의 비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수익이 2종 수익권자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1종 수익권에 이익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

- (위원) 대리인한테 짧게 확인만 하겠음. 아이티엠반도체 물량배정 현황임. 첫째는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들에게 1.92억 원 물량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이 몇 개사인지?

▶ (진술인) 호주부동산펀드 투자자가 원래는 6개사인데 이 아이티엠반도체는 2개 회사가 들어왔음.

- (위원) 110위 ○○○○○○○, 111위는 ○○○연금보험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이 순위가 111위까지인지?

▶ (진술인) 총 830개 정도의 기관이 참여했음.

▷ 제 283호 안전 관련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진술인들의 진술과 금감원의 안전보고를 다 마쳤음. 오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단 주요 법률적 쟁점사항들

과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 실제 그것을 뒷받침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음. 그래서 저희 증선위원들 모두 다음과 같이 일단 의견을 모았음. 우선, 오늘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음. 그래서 다음번에는 양측의 입장을 보고 저희가 증선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음.

○ 각각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함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2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22시38분 폐회)